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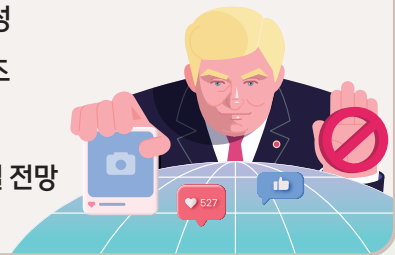
KPF 미디어브리프

K P F Media Brief Webzine

돌아온 트럼프, 빅테크와 AI 산업 대격변 예고 - 트럼프 2.0 미디어 정책 전망과 시사점

전창영 |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 ✓ 공화당 상하원 장악하며 트럼프의 미디어 정책 추진에 유리한 환경 조성
- ✓ 'Section 230' 개정 등 빅테크 압박 강화하며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조
- ✓ 'AI 맨해튼 프로젝트' 추진 ... AI 산업 패권 변화
- ✓ EU 등 글로벌 미디어 정책과 충돌하며 국내 미디어 산업에도 영향 미칠 전망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2기 행정부(트럼프 2.0)가 미디어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1기 행정부(2017~2021) 시절 주류언론과 대립각을 세운 경험이 있으며, 2기 행정부에서는 보다 강경하고 뚜렷한 미디어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전망된다.

트럼프 2.0 미디어 정책은 언론 자유, 빅테크 규제, AI 패권, 글로벌 미디어 협력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 기업과 언론사는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전략을 재정비하고,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격변이 예상되는 트럼프 2.0 시대 미디어 환경을 맞이하는 국내 언론 역시 이를 대비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2.0 미디어 정책의 주요 쟁점과 전망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한다.

■ ‘착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 조항 개정

▲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Section 230’ 수정

트럼프는 1기 행정부 시절 SNS 플랫폼의 편향성과 반독점 이슈를 연이어 제기한 바 있다. 2기 행정부에서도 소셜미디어를 규제하고, 섹션 230 조항을 개정하는 등 빅테크 규제 관련 미디어 정책이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글, 메타(페이스북), 엑스(X·옛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들이 보수적인 의견을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섹션 230(Section 230·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면책 조항)’ 개정이다. 통신품위법(CDA)은 1996년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섹션 230은 나중에 추가된 조항으로 선한 의도를 갖고 콘텐츠 중재 작업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발행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¹⁾. 덕분에 야후(Yahoo!) 등 초기 인터넷 사업자들은 소송 걱정 없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터넷에서 허위정보와 루머가 확산되고 극단화가 이뤄지면서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까지 섹션 230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바이든은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했으며, 트럼프는 빅테크 기업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주장하며 섹션 230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²⁾.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킨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섹션 230이 폐지될 경우, 책임을 면제받지 못하는 플랫폼들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³⁾. 이후 바이든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철회하였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변화없이 다시 트럼프의 시대가 되면서 통신품위법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1)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EFF), “Section 230”. <https://www.eff.org/issues/cda230>

2) Columbia Journalism Review(2024.12.5.). “Whither Section 230 Under Trump 2.0?”. https://www.cjr.org/the_media_today/section_230_trump.php

3) 최승재(2020).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인가”. <신문과방송> 2020년 8월호.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표 1 통신품위법(CDA) 'Section 230' C항('착한 사마리아인' 조항)

조항	내용
<p>(c) Protection for “Good Samaritan” blocking and screening of offensive material</p> <p>(1) Treatment of publisher or speaker</p> <p>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treated as the publisher or speaker of any information provided by another information content provider.</p>	<p>‘상호작용하는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제3자인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의 발행인 또는 발언자로 취급되지 않는다’</p>
<p>(2) Civil liability</p> <p>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held liable on account of—</p> <p>(A) any action voluntarily taken in good faith to restrict access to or availability of material that the provider or user considers to be obscene, lewd, lascivious, filthy, excessively violent, harassing, or otherwise objectionable, whether or not such material is constitutionally protected; or</p>	<p>‘서비스 제공자는 불쾌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신의성실에 따른 행동일 경우 콘텐츠 소유자로부터 책임을 면제한다’</p>

출처: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20-title47/pdf/USCODE-2020-title47-chap5-subchapII-partI-sec230.pdf>

트럼프는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압박을 위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 분할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0 법무부 반독점 책임자로 지명된 게일 슬레이터(Gail Slater)는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소송을 계속할 것이다. 애초 업계에서는 트럼프2.0 시대가 열리면서 바이든 행정부 때 강화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빅테크를 향한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⁴⁾.

▲ 소셜미디어에 집착하는 트럼프와 머스크

트럼프2.0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폭력·혐오 조장 콘텐츠 검열 등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가 유해 콘텐츠 검열과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정반대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⁵⁾. 이같은 입장은 이미 예견되기도 했다. 2021년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가 SNS에 게시물을 올려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동 등 폭력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계정이 차단되기도 했다. 이때부터 트럼프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트럼프2.0 실세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는 엑스(X·옛 트위터)를 인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피난처’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4) The Economic Times(2025.2.21.). “Donald Trump admin to press ahead with Amazon, Meta antitrust cases”.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tech/technology/donald-trump-admin-to-press-ahead-with-amazon-meta-antitrust-cases/articleshow/118434521.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

5) The New York Times(2024.12.30.). “Social Media Companies Face Global Tug-of-War Over Free Speech”. <https://www.nytimes.com/2024/12/30/technology/trump-administration-speech-policy.html>

트럼프와 머스크가 강조하는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특정 성향의 콘텐츠가 제한 없이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며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허위조작정보 및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된다. 갈수록 유튜브 저널리즘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와 루머 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객관성과 정확성 등 저널리즘 품질을 지키려는 신문사와 방송사 등 레거시 미디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 ‘AI 맨해튼 프로젝트’ 통한 AI 산업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 국가 전략 산업 핵심, AI 패권 변화 예고

AI 기술이 미디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트럼프2.0 AI 관련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 주도 혁신을 장려하고 있다. AI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로 인해 미국 AI 산업은 트럼프2.0의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 확대에 의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는 AI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며, ‘AI 맨해튼 프로젝트(AI Project Manhattan)’라는 대규모 투자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⁶⁾.

문제는 트럼프의 AI 규제 완화정책이 글로벌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EU는 윤리적 문제로 인해 AI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AI 생태계 협력 구조가 약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 ‘AI 규제 및 윤리 가이드라인(E.O. 14110)’ 폐지 움직임

트럼프2.0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 14110⁷⁾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전·안보·혁신·경쟁, 노동, 시민권, 소비자보호, 프라이버시, 공공부문, 국제협력 등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 담당 연방기관에 이행 시점을 정해 과업을 부과하는 범정부적 기획이었다. 트럼프는 이 중 AI 행정명령이 ‘불법 검열’이며 AI 혁신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LLM 중심의 시의적인 정책들도 있기 때문에 전면 무효화 대신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 AI 스타트업들은 민간 AI 서비스의 점유율 확대, AI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 강화, 군사용 AI 분야의 정부 프로젝트 참여 등 확대되는 기회를 준비해야 한다. 국내 AI 산업 역시 많은 기회와 도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새로운 정책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윤리적 기준 등을 조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6) Counterpoint(2025.1.23.). ““AI Project Manhattan” is Born as US President Trump Takes Office”. <https://www.counterpointresearch.com/insight/ai-project-manhattan-is-born-as-us-president-trump-takes-office>

7) ‘AI의 안전·안보·신뢰성 있는 개발·이용에 관한 행정명령(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O.14110)

■ 언론인보호법안 폐기 및 지상파 소유 제한 규제 완화

▲ 언론인보호법안(The PRESS Act) 폐기와 기자실 출입 매체 조정

트럼프는 ‘국가의 착취적 스파이 행위로부터의 기자 보호법안(Protect Reporters From Exploitative State Spying Act)’을 폐기할 것으로 보인다⁸⁾. 이 법안은 정부가 기자들에게 정보 제공자(취재원)를 공개하라고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해당 기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를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⁹⁾. 언론자유재단(Freedom of the Press Foundation), 언론 자유를 위한 기자 위원회(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언론인 보호위원회 등 이 법안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바이든 임기가 끝나기 전에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수개월째 계류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주요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언론사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비판적인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페이크뉴스’를 퍼뜨린 언론사들을 상대로 대규모 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면서 법적 비용 부담을 통해 언론사들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¹⁰⁾.

이미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당시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사를 ‘국민의 적(Enemy of the People)’이라고 지칭하며 강한 불신을 드러낸 바 있다¹¹⁾. 2기 행정부에서도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확대하고,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제한하는 등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¹²⁾. 특히 CBS, NBC, ABC, FOX와 같은 주류 미디어 방송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거듭 위협했고, 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보도하는 언론사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예컨대 트럼프2.0 재무부와 국무부는 각각 뉴욕타임스와 폴리티코와의 구독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국방부는 언론사 기자실 자리를 순환 배치한다는 명목으로 뉴욕타임스, NBC, NPR, 폴리티코 대신 보수성향 매체인 One America News Network, Breitbart News Network, 뉴욕포스트 등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8) CNN(2024.11.21.). “Trump demands Republicans ‘kill’ bill that would protect journalists from government spying”. <https://edition.cnn.com/2024/11/21/media/trump-press-act-journalists-media-freedom/index.html>

9) Congressman Jamie Raskin. <The Protect Reporters from Exploitative State Spying Act>. https://raskin.house.gov/_cache/files/2/0/207e7ed3-7e40-452b-be24-9ca1d305a905/4863CB9E87E9AF56E9709D27D8674FFA.press-act-one-pager-2023.pdf

10) The New York Times(2025.1.30.). “Trump’s New Line of Attack Against the Media Gains Momentum”. <https://www.nytimes.com/2025/02/07/business/media/trump-media-lawsuits.html>

11) The Guardian(2018.8.3.). “‘Enemy of the people’: Trump’s phrase and its echoes of totalitarianism”.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8/aug/03/trump-enemy-of-the-people-meaning-history>

12) AP News(2025.2.27.). “The White House says it ‘will determine’ which news outlets cover Trump, rotating traditional ones”. <https://apnews.com/article/trump-ap-news-outlets-ban-gulf-mexico-25c77f617418dd3ca2791af90b263a59>

▲ 공영 방송사 예산 삭감과 지상파 소유 제한 규제 폐지

트럼프는 1기 행정부부터 공영방송인 PBS와 NPR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공영방송과 비영리 교육 방송국은 연방 자금 지원과 라이선스까지 박탈할 위기에 놓여있다(Project 2025)¹³⁾.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장도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겠다는 기고문을 작성하기도 했다¹⁴⁾.

트럼프2.0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취임한 브렌던 카(Brendan Thomas Carr)는 공영 방송사 면허 갱신 심사 시 공익성 의무 이행을 엄격하게 평가할 것을 발표했다. 미디어 기업들의 인수합병과 유료방송시장 개편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형 미디어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강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을 관할하는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 대대적인 조직 축소를 명령했다. USAGM은 북한,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의 실상을 알려온 역할을 해왔는데, 트럼프는 1기 행정부시절 VOA 보도 내용에 자주 불만을 표명한 바 있다¹⁵⁾.

한편 지상파 소유 제한 규제는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전부터 미국 지역 미디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2017년 트럼프1.0 시기에도 같은 시장에서 TV와 신문을 소유할 수 없게 규정을 만들었고, TV·라디오 방송국을 소유하는 데 대한 규제를 없앴 바 있다.

이와 같은 트럼프의 정책 변화는 공영방송 및 레거시 미디어의 운영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 바이든과 트럼프 2.0 비교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달리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백악관 브리핑을 정상화하고, 기자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접근 방식을 유지했다. 먼저 백악관 브리핑을 정례화하였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브리핑이 자주 취소된 반면, 바이든은 언론과의 소통을 강조하였다. 또한 NPR, PBS 등의 공영방송 예산을 증액하고, 독립 언론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바이든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였다. 이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 막기 위해 강력한 반독점 규제를 시행하였으며 구글, 애플 등 상대로 대규모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였다.

13)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는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주도하여 작성한 약 900쪽 분량의 정책 보고서로, 트럼프 재집권을 대비하여 2022년부터 제작되었으며 '트럼프 2.0 공약집'으로 불려왔다.

14) Wall Street Journal(2024.11.20.). "Elon Musk and Vivek Ramaswamy: The DOGE Plan to Reform Government". <https://www.wsj.com/opinion/musk-and-ramaswamy-the-doge-plan-to-reform-government-supreme-court-guidance-end-executive-power-grab-fa51c020>

15) BBC(2025.3.17.). "Trump moves to close down Voice of America". <https://www.bbc.com/news/articles/cvge4l109r3o>

반면, 트럼프 2.0은 이러한 바이든의 정책 기조를 정반대로 뒤집고, 언론을 보다 강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화한 공영방송 지원을 철회하는 등 기업 자유를 강조하고 소셜미디어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2.0은 1기보다 더욱 강경한 미디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언론 자유에 중대한 도전이 될 전망이다. 언론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국제사회와 미디어 단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표 2 주요 정책 비교표

	바이든 (2021~2025.1)	트럼프 2.0 (2025.1~현재)
빅테크	• 반독점 규제 강화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 상대 소송)	• 빅테크 기업 시장 지배력 압박 (플랫폼 개혁, 섹션 230 개정 본격화)
AI 산업	• AI 윤리 규제 강화 (EU, OECD 기준 준수)	• AI 투자 확대 (‘AI 맨해튼 프로젝트’ 등 국가 주도 AI 개발)
언론	• 언론인보호법안 발의 (권력으로부터 언론인 취재활동 및 신변 보호 등) • 언론 자유 보호 (백악관 브리핑 정례화, 독립 언론 지원)	• 언론인보호법안 폐기 • 기자실 출입매체 조정 • 언론사 압박 강화 (비판 언론 백악관 접근 제한, 명예훼손 소송 확대)
미디어	• 공영방송 지원 확대 • 방송사 소유 권한 엄격 통제	• 공영방송 예산 대폭 삭감, 폐지 위협 • 지상파 소유 제한 규제 폐지

■ 시사점

트럼프 2.0 행정부는 1기보다 더욱 강경하고 체계적인 미디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언론 자유를 넘어서 글로벌 미디어 산업 전반에 있어서 큰 도전을 가져올 수 있다. 국내 언론사, 미디어 기업,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언론사, 빅테크기업 등 국내 미디어 지형 변화에 전략 대응

트럼프 2.0 행정부의 언론 통제 강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 언론 관련 단체들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의 CDA 개정이 국내 미디어 지형에도 영향을 주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가 제약을 받게 되고, 나아가 국내 뉴스 미디어 스타트업(뉴스레터, 독립미디어플랫폼)들의 뉴스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 역시 증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포털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책임,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등 국내 언론 산업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비판하며 미국 테크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예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온라인서비스이용자 보호법’과 ‘공정거래법개정안(플랫폼법)’ 등 한국형 DSA를 표방한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글로벌 미디어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AI 산업 패권 변화와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대응 필요

트럼프는 'AI 맨해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AI 산업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AI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반면, 글로벌 미디어 산업에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AI를 활용한 콘텐츠 생성, 배포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국내 미디어 기업들은 AI 기술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AI 규제 변화에 따른 법적·윤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I를 통한 뉴스 자동 생성, 딥페이크 영상 검출 기술, 저널리즘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AI 개발을 둘러싼 논의가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 인플루언서와 언론의 경계 모호 ... 저널리즘 역할 중요

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 규제 강화를 대비해 법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보수 성향의 메시지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강조하는 소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극단적 성향의 메시지가 유통된다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범람할 것이다. 최근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스 인플루언서와 언론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와 루머 등이 확산되고, 트럼프 2.0 시대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어느 때보다 미디어의 역할, 특히 저널리즘 가치 실현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2025년
3호

KPF 미디어브리프

K P F M e d i a B r i e f W e b z i n e

발행인 김효재

편집인 남정호

기 획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발행일 2025년 3월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3층

전화 (02) 2001-7698 팩스 (02) 2001-7740

www.kpf.or.kr

편집 (주)나눔커뮤니케이션

0403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7길 16 교평빌딩 304호

전화 (02) 333-7136 팩스 (02) 333-7146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2025

〈KPF미디어브리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